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와 향후 과제

김 국 신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실장

베이징에서 개최된 2단계 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9월 19일 북한의 핵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포함한 6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 5개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를 표명하고, 한국은 200만KW 전력 공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별도의 포럼을 통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이후 발생한 2차 북핵 위기는 35개월 만에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6자회담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대북전력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중대 제안을 통해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함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모호하게 합의 된 경수로 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난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 등 5개국이 생각하고 있는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이유로 5개국과 약속한 합의 사항을 완전히 폐기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단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도 사용할 카드가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북·미간 신뢰가 쌓여 간다면 경수로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 제5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협상에 관한 신경전에 주력하기 보다는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길 태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은 먼저 핵 폐기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NPT 체제에 조기 복귀하고 IAEA의 검증을 받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개방을 성공적으

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향후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럼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전개해 왔는 바, 이를 재개하여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된다.